

## 유승삼 칼럼

## '101번째' 국정과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당선자의 이삿집 중에서 가장 큰 짐이 1만5천권의 정서라는 기사를 읽다가 반사적으로 떠오른 것은 YS를 위해 만들었다는 '교양서적 다이제스트'였다. 청와대 임성까지 YS의 피주머니 역할을 톡톡히 했던 이른바 '동승동침'은 정치투쟁하느라 지식과 교양을 쌓을 기회가 없었던 YS를 위해 '정관정요(貞觀政要)' '군주론' '메가트랜드 2000' 등 3백권 정도의 책을 아주 쉽고 짧게 요약해서 주었다는 것이다.

이 자체가 훌륭한 것은 없다. 대통령이나 정치지도자쯤 되면 교양과 지식을 폭넓게 갖추면 갖추수록 좋겠지만 실제로 그들은 책을 손에 쥘 시간조차 짜내기 힘든 형편이기가 십상일 것이다. 따라서 '요약본 만들기'는 좋은 착상이었다고 본다.

그러면서도 역시 아쉬운 느낌은 못내 떨쳐버리기 어렵다. 때로는 내용과 표현이 너무 좋아서, 또 어떤 경우엔 무슨 뜻인지 일른 이해되지 않아서 한 구절을 읽고 또 읽으면서 감동하기도 하고 골치를 앓기도 하는 책읽기의 기쁨과 고통을 요약본을 통해서 어찌 맛볼 수 있겠는가. 역시 책은 온전한 것을 스스로 읽어야 피와 살이 되는 지식과 교양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어느 정도 읽었는지는 모르나 여하튼 1만5천권이란 장서의 주인이 청와대에 들어간다는 건 흐뭇한 일이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런 장서가가 이끌 정권의 인수위가 발표한 1백가지나 되는 국정과제 속에서 출판이나 도서관과 같은, 책과 관련된 문화정책은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다. '따지면 빠진 것이 어디 책 관련 정책뿐이겠느냐, 1백개만 열거하다 보니 빠졌을 뿐 중요성을 모르고 있는 건 아니다'고 돌려말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설사 그렇더라도 그 정책을 1백개나 되는 과제 속에도 넣지 않은 '문맹'은 변명하기 어려울 것이다.

1백가지 국정과제 속엔 교육을 개혁하고 사회의 정보화를 촉진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책에 관한, 출판에 관한, 도서관에 관한 정책이 없어도 과연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학교교육과 도서관 및 출판, 그리고 정보화사업을 각기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

러나 이는 잘못이다. 학교 교육과 도서관 및 출판은 유기적 통일체를 이뤄야 한다. 또 정보화나 정보고속도로니 하면 PC나 광케이블이니 하는 것들이나 연상하고 말지만 도서관망이야말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정보고속도로다.

출판이나 도서관망과 같은 교육·문화인프라 없이 교육을 개혁하고 정보화를 이룩하려는 것은 마치 초석을 깔지 않고 기둥을 세우려는 것과 같다.

요즘 출판계는 '단군 이래 최악'이라는 불황을 겪고 있다. 서점과 도매상이 잇따라 부도를 내고 출판사들은 신간 발행이나 출고를 자제하고 그러니 서점과 도매상의 경영은 더욱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 이리다가 IMF 위기가 사라지기 전에는 단 한권의 신간도 안나오는 사태가 빚어질지 모르겠다.

그러나 어려운 사정과는 달리 해결책을 뜻밖에도 아주 간단하고 쉽다. 가령 우리나라에 3천개소의 공공도서관이 있다고 하자. 그래서 좋은 책만 내면 각 도서관이 적어도 한 권씩은 사준다고 치자. 그러면 문제가 일시에 풀린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우리의 공공도서관은 4백개소도 안된다. 그나마 예산의 90% 이상을 인건비와 시설유지비로 써버려 책 구입은 엄두조차 못내고 있는 형편이다. 도서관예산은 대만과 견주어도 그 30%밖에 안된다.

법이나 제도 탓은 아니다. 이런 현실을 개선한다고 지난 94년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마련해 기금 1천억원을 단계적으로 조성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단 한푼도 적립되지 않았다. 올해 예산요구서에 겨우 10억원이 들어 있었는데 그나마 잘려버렸다. 가위 책·출판 및 도서관에 관한 '병적인 무관심이요, 무지'라고 아니할 수 없다.

도서관 수준은 선진화의 가장 정확한 척도라고 한다. 1만5천권의 장서가가 이끄는 나라의 출판 및 도서관정책이 이렇다고 해서야 앞뒤가 맞지도 않고 체면이 서지도 않는 일이다. 뒤늦었으나마 당선자가 이를 챙겨 출판 및 도서관정책을 국정과제에 추가해야 한다. 요즘 마침 국내의 출판계에는 '101가지'란 제목이 대유행이다.

중앙 M & B 대표